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413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2011. 6. 21. 설립된 주식회사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B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발전소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설비용량	비고
1호기	화력 발전설비(가스터빈 등)	580MW × 2기	화력발전소
	폐열 발전설비(증기터빈 등)	320MW × 1기	폐열발전소
2호기	화력 발전설비(가스터빈 등)	580MW × 2기	화력발전소
	폐열 발전설비(증기터빈 등)	320MW × 1기	폐열발전소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Gas Turbine) 등 화력 발전설비(이하 '1차 발전설비'라 한다)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한 다음(이하 '1차 생산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1차 발전단계'라 한다), ②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된 배기열을 포집해 물을 끓여 발생시킨 증기로 증기터빈(Steam Turbine) 등 폐열 발전설비(이하 '2차 발전설비'라 한다)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이하 '2차 생산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는 설비를 '2차 발전설비'라 하며,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2차 발전단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부터 2021.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 규정과 총칭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에 따른 지역자



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5,110,261,13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차 생산전력은 1차 생산전력과 달리 화석연료의 연소가 아닌 배기열로 발생시킨 증기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고, 2차 생산전력은 1차 발전설비(화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화력 발전소)가 아닌 2차 발전설비(폐열 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폐열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므로, 2차 생산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2016. 10.부터 2021. 2.분까지)가 부과될 수 없다.

마.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정 흐름을 보면 1차 전력 생산 후 고온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라는 매개체를 통해 폐열발전 2단계로 이동하므로 1차 화력발전과 2차 폐열발전은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연료를 연소시키는 1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2개의 발전시설이 연속적 과정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폐열발전의 생산전력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도 화석연료의 직·간접 또는 1차·2차 단계적 이용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고온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이고, ②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단계와 1차 발전단계는 별도의 발전단계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경우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차 발전단계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차 발전단계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차 발전단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2차 생산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2차 생산전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 폐열 발전설비인 2차 발전설비는 화력발전 설비가 아니므로 2차 생산전력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도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정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생산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



상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 특정한 전력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등에서 발전이나 화력발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따위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원동기를 써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¹⁾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²⁾이고, 화석연료의 사전적 정의는 '지질시대에 생물이 땅 속에 묻히어 화석같이 굳어져 오늘날 연료로 이용하는 물질, 석탄 따위가 이에 속한다'³⁾이다.

2) 위와 같이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이라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화력발전에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한 고온고압의 기체를 직접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 네이버 물리학백과 참조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그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한 뒤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2차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2차 발전에서 사용되는 배기열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2차 발전에도 액화천연가스의 연소가 요구된다.

나)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것은 1차 발전뿐 아니라 2차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할 때 1차 발전뿐 아니라 2차 발전도 전제되어 있다.

다) 1, 2차 발전을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1차 발전만 할 때와 비교하여 열효율 및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식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차 발전만을 따로 떼어 화력발전과 분리되는 별개의 발전으로 보아야만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3) 지방세법은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제2호 나목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4) 구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



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였었는데, 국회는 ①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원자력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과세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인 점, ②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약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우리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제6호)이라고 정하고 있어(구 지방세법 제



146조 제1항), 연소를 위해 투입된 액화천연가스의 양,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과 관계없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 즉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 그 결과 동일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효율을 높여 전력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추가 생산하는 것이 열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별개로 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 스팀터빈을 구동하여 발전을 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전에 사용되는 스팀터빈을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온배수 대량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수산업 피해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과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상 화석연료의 '이용'은 개정 지방세법상 화석연료의 '연소'와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는 법문을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시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발전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2차 발전은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구 지방세법상 화석연료의 '이용'이 화석연료의 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 등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



고, 이러한 해석이 구 지방세법상 화석연료 '이용'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미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2차 발전도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된 전력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는, 1차 발전설비와 2차 발전설비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설비이고, 각 발전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원(1차 발전의 경우 화석연료, 2차 발전의 경우 폐열)은 현행 에너지 관련 법체계상 별개의 에너지원으로 구별되어 취급되므로, 화석연료에 대한 이용 없이 폐열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2차 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 2013. 12. 26. 선고 2012두10703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 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2차 발전설비 부분을 1차 발전설비 부분과 따로 떼어 별도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 내지 '에너지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7) 원고는, 화력발전소 이외의 시설에서 생성된 폐열을 이용한 발전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발전소의 2차 발전에 대하여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이외의 시설에서 생성된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가 원고의 2차 발전 설비와 유사하다거나 이러한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차 발전설비가 이 사건 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다면 1차 발전설비와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해 보이는 점, 원고가 1, 2차 각 생산전력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여 2차 발전설비가 1차 발전설비와 무관한 별개의 설비로 볼 수는 없는 점, 1차 발전단계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단계 역시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생산전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9

별지1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순 번	세목	처분일	귀속연도	당초 신고·납부세 액	감액 경정청구액	거부처분액
1	지역 자원시 설세	2021. 11. 5.	2016. 10. ~ 2016. 12.	29,957,940	6,066,600	6,066,600
2			2017. 1. ~ 2017. 12.	3,155,434,881	1,078,589,100	1,078,589,100
3			2018. 1. ~ 2018. 12.	3,696,394,500	1,287,380,400	1,287,380,400
4			2019. 1. ~ 2019. 12.	3,824,453,340	1,333,566,906	1,333,566,906
5			2020. 1. ~ 2020. 12.	3,458,950,296	1,212,871,665	1,212,871,665
6			2021. 1. ~ 2021. 2.	538,949,280	191,786,466	191,786,466
합계				14,704,140,237	5,110,261,137	5,110,261,137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9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